

## 후퇴하는 ESG 열풍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은?

지난 10년간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기업 경영의 화두이자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떠올랐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후퇴하고 있다. 원래 ESG는 2004년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과 금융업계가 협업해 발표한 UNEP FI(Finance Initiative)에서 제안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기업과 투자자들이 경영과 투자 활동에 있어서 재무적 지표 이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 사회에서 ESG는 젠더운동(#MeToo), 인종운동(Black Lives Matter), 기후운동(Sunrise Movement) 등 다양한 사회운동과 연계되면서 정치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급기야 미국 보수진영에서는 ESG를 '깨어있는 자본주의'(Woke Capitalism)\*의 일부로 규정하고, ESG가 미국 내에 급진적인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자유시장 원칙을 위반하며, 결국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 Woke Capitalism: 기업들이 인종평등, 성소수자 권리, 양성평등, 기후변화 등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채택하고 이를 홍보하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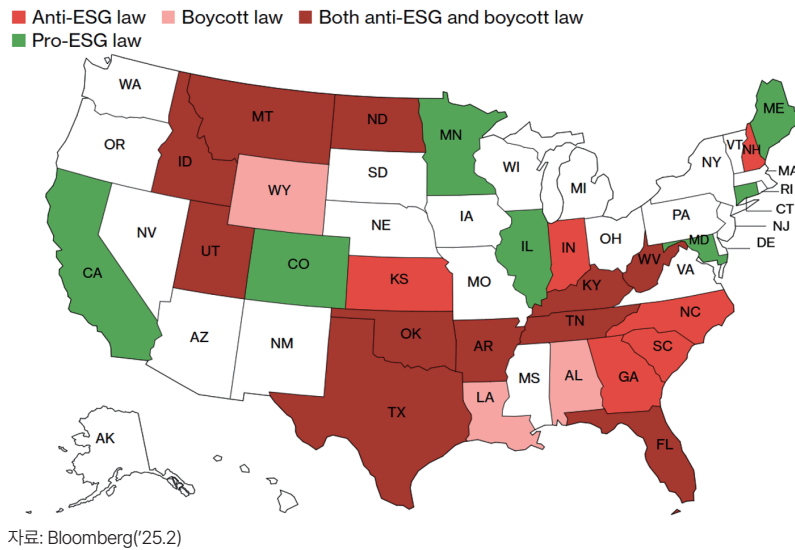
미국 내 ESG에 대한 반격(backlash)은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더욱 본격화됐다. 먼저 환경(E)에 대한 반격이 가장 두드러진다. 평소 기후변화를 '사기'(scam)라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전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폐지하며 전기차, 풍력, 태양광 사업에 지급했던 보조금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불과 몇 년 전까지 ESG에서 금기시했던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규제를 철회하고 대규모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 비용을 누릴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사회(S) 영역에서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Diversity, Equity, Inclusiveness) 정책이 큰 반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DEI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이념을 기업, 학교, 정부, 스포츠, 군대 등 주요 사회 현장에서 제거하기 시작했다. 기업들도 정치적 압박과 소송 위협 속에서 DEI 정책을 빠르게 수정하거나 철회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 메타, 아마존, 보잉, 월마트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은 DEI 담당 부서를 아예 해체하거나 연례보고서에서도 DEI와 관련된 언급을 배제하였다. 바이든 정부 시기와는 달리 DEI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자 페널티 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업의 반(反) DEI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G) 영역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새롭게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으로 지명된 폴 애킨스(Paul Atkins)는 행동주의 주주(Activist Shareholders)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기업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SEC는 "주주총회는 특정 정치적 이념을 토론하는 장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ESG와 관련해 행동주의 주주가 기업 경영 활동에 미세관리적(micro-manage) 개입을 한다고 판단된다면, 기업들이 이를 배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기업 경영진과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폴 애킨스가 취임하면 기후공시법(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 for Investor)도 폐기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반(反) ESG 움직임은 연방정부 차원을 넘어 각 주별로도 확산되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ESG를 반대(Anti) 또는 금지(Boycott)하는 법안을 발의한 주는 총 20개주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해당주에서 ESG를 내세우는 기업들은 즉각적인 법적 소송 위협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 미국 주별 ESG 입법현황('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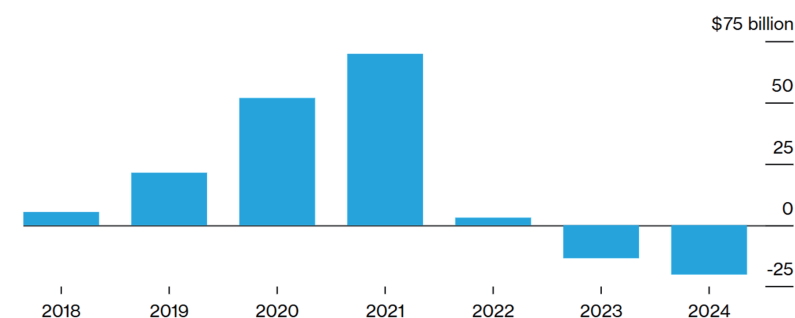


금융업계에서도 탈(脫) ESG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20년초까지만 하더라도 ESG 열풍을 주도했던 BlackRock의 CEO 래리 핑크(Larry Fink)는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들의 법적 소송이 이어지자 '22년 투자자 서한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화석연료 세계 1위 투자 회사이며, 화석연료 산업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그 이후 ESG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인상적인 움직임은 트럼프 당선 직후 Goldman Sachs, JP Morgan, Citigroup, Bank of America, Morgan Stanley 등 미국 상위 5개 은행 모두 일제히 NZBA(Net Zero Banking Alliance)\*에서 탈퇴한 것이다. 이러한 탈퇴의 배경에는 "NZBA는 금융산업이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 카르텔(climate cartel)로서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은행의 공모행위 증거"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정치적 압력과 소송 위협이 있었다. 곧이어 캐나다와 호주, 일본의 주요 은행들도 NZBA 탈퇴 행렬의 뒤를 이었다.

\* NZBA: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Glasgow)에서 개최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출범한 기후금융연합(41개국 120개 은행)으로, 회원사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결의함

ESG에 대한 시장의 투자열기는 이미 미 대선 이전부터 식기 시작했다. 시장조사기관인 모닝스타(Morningstar)에 따르면 '21년 700억불에 달했던 ESG 펀드 투자금은 '22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23년 130억불, '24년 200억불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다른 전통적인 펀드에는 7,400억불의 신규 투자자금이 유입되었다. 이제 많은 자산운용사와 투자업계에서는 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나 탄소중립 목표를 거론하는 일을 삼가고 있으며, 그들의 홈페이지에서도 ESG 펀드 홍보 섹션을 내리고 있다.

### ESG 펀드 투자금 유입 차이



자료: Morningstar('25.2)

유럽에서 나타나는 ESG에 대한 반발은 미국과는 달리 이념적 논쟁보다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피로감과 위기의식에서 비롯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감한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EU 경제가 과도한 규제에 발목이 잡힌다면 미국과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EU는 2050년까지 유럽 대륙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ESG 관련 규칙의 최전선에 서있었다. 2020년 EU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정의하는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이어 2개의 ESG 관련 규칙인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과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유럽 기업들은 이러한 EU의 ESG 규제로 인해 이사회 성별 다양성부터 시작해 기업 활동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 위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에 대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역내 최대 경제국인 프랑스와 독일은 ESG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EU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의 기후담당관인 보프케 호스트라(Wopke Hoekstra)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적용 대상 기업의 80%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은 최근 분위기 변화를 반영한다. 또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인 프렌치 힐(French Hill) 의원이 EU의 CSDDD와 같은 ESG 규제가 미국 기업의 유럽 시장에서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일종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미국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도 유럽 ESG 규제에 보복하기 위한 '무역 조치'(Trade Tools)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EU의 ESG 규제는 내부 회원국에 더하여 미국으로부터도 공격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CBAM: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일종의 관세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5년 12월까지 시범기관을 거쳐 '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한국 기업들도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흐름에 발맞추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ESG 환경의 급변에 따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찾아왔다.

우선 기존에 발표한 ESG 목표의 점진적 조정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목표 철회는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제적·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목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많은 ESG 관련 인증과 평가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둘째, 해외 기업의 ESG 전략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은행인 BNP Paribas는 과도하게 정치화된 ESG라는 단어 대신 적응(adaptation), 전환(transition), 회복탄력성(resilience)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자와 규제기관, 그리고 소비자와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지역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제조업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같이 비용 절감과 연계되는 환경 요소에 집중하는 한편, 금융업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도 규제 준수를 이행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 미국 시장에서는 ESG라는 단어 대신 중립적인 용어를 활용해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EU 시장에서는 ESG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도한 비용 투자보다는 필수적인 규제 준수에 집중하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적 풍향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유형은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단기적 시류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향후 ESG라는 레이블에 얽매이기보다는 기업 경쟁력 강화, 리스크 관리, 그리고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 등 기업 경영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FKI